

민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맹공…“특검수사 필요”

제주서 현장최고위…“조희대 대법원장 직무 수행 부적절” 사퇴 촉구
정청래 “사법부, 위상 위해 개혁 필요”…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와 탄핵까지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개혁은 법원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같은 당 부총장 의원의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사법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의 윤석열의 파면 직후에 부적절한 오찬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라며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사안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반드시 특검이 그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내란쿠데타에 이은 사법부의 쿠데타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쿠데타에 이어서 지금 내란종식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4·19혁명부터 그리고 얼마 전 빛의 혁명까지 그 어떤 반민주세력도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 특검에서는 조희대-한덕수 수상한 회담을 당사 수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병선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농단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압박도 이어갔다. 특히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지를 파하고자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권을 삭제하는 방안이 힘을 실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황으로,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며 “(후보 추천 위에)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있어 정치권 추천은 배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서영교 의원은 MBC 뉴스에 출연해 개인의 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본다”이라며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내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상실질심사를 받은 권성동 의원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법원은 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첫 구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 사례이자,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이 특별검사 수사로 신병이 확보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상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조직과 자금 지원을 약속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통일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의 다 이여리와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그리고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를 입증했다. 또 권 의원이 수사 초기 휴대전화로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해 수사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권 의원 신병을 확보한 만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의 추가 자금 거래 의혹,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이 시작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논쟁’에 “헌법 읽어보시라”

“국민 납득 못시키면 제도 개선 필요…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그 이후 발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전개된 논란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너

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의 권한·역할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설명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사법개혁 논의의 기구에 언제나 법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언석, ‘노상원 수첩 망언’ 첫 유감 표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국교섭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불귀의 객이 됐을 거다, 죽었을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한다”며 “진실과 팩트에 맞게 발언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귀의 객, 죽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지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며 “전체 상황을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송 원내대표의 ‘노상원 수첩’ 발언 인정 기사 제목을 올리고 “송언석씨,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사과하라”며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히 성공했다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러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민주당은 이 발언의 당사자로 송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